

研究論文

# 서유럽 정치사상사에서 통치술 의미와 한국정치에서 주는 함의: 포스트 모던의 정치리더쉽에 대한 소고

홍성민\*

- 
- I. 서론 정치리더쉽에서 통치술로
  - II. 국가운영의 두 모델 목자 양떼의 모델과 시민-국가의 모델
  - III. 포스트 모던의 정치운영 푸코의 통치술
  - IV. 한국 현대정치에서 통치술의 교훈
- 

## I. 서론: 정치리더쉽에서 통치술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통치술(*art de gouverner*)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서양정치사상속에 나타난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이것을 오늘날 한국정치 속에서 요구되는 국가경영의 철학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작업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비록 이 논문이 서양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 목표는 현대 한국정치에서 바람직한 정치지도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라는 현실적인 물음에 답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정치리더쉽이라는 개념이 갖는 한계를 논하고, 이것을 대치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통치술 개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우선 리더쉽이라는 개념의 학론적 활용범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 학계에서

---

\* 동아대학교 교수, 정치학

정치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진 연구업적을 살펴보면 그 부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인물분석을 정치리더십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경우이고 (정윤재, 2001), 둘째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달성하는 것이 정치리더십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김석준(2002), 함성득 (1999, 2000)의 경우가 이러한 예의 대표이다 그는 인물론이라는 주제아래 한국현대정치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통치스타일을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와 연결지워 연구하면서 대통령 한 인물의 성장배경, 출신성분, 사회적 성격, 조직장악 능력 따위와 같은 개인사적인 요인들을 통해 역대 정권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원칙을 논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와 관계에서 어떠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솔하는가가 바로 정치리더십의 핵심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행정학과 같은 인접학문에서 정치리더십을 다룰 때 비슷하게 반복된다.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도자의 자질론이나 유형이론이라는 것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행동유형이나 특성 등에 주목하는 이론틀이고 (김명훈, 1973),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조직특성에 따른 리더의 역할체계 (박우순, 1998)는 정치조직의 규율 아래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 틀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정치리더십이라는 개념 아래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원칙을 찾으려는 노력은 최고 지도자들의 인물평가와 행동양식에 초점이 두어져 왔다고 평가되는데, 여기서 필자는 적어도 세가지 차원에서 기존의 정치리더십 개념을 통해서 국가운영의 원리를 밝히려는 시도가 이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 개인이 지도자로서 처한 사회적 분위기나 상황조건이 무시된 채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일반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세간에서 마키아벨리나 비스마르크와 같은 인물을 정치가들이 본 받아야 할 정치리더십의 전형으로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술수에 능숙했던 동일한 권력형의 리더십을 소유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들이 처한 시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원칙은 소수 권력엘리트에 의한 권력행사 방식이라는 개인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여기에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권력구조의 양상을 동시에 포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판단하건대 정치리더십이라는 개념은 권력구조의 시대적 객관성을 설명하지 못한 채 권력자의 개인적인 성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행정학 이론에서 상황론이나 정치학에서 조직론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 거론되는 상황이나 조직이란 개인이 속한 권력행사권 범위로 한정되고 있을 뿐 시대적 상황이 빚어내고 있는 물질적 토대라는 차원에서 권력의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최고권력자의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나 행동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최고권력자가 시대적으로 마주한 독특한 사회적 권력상황이 존재하며, 이것은 개인의 특성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구조적 힘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정치리더십이라는 개념에는 정치권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들이 바람직한 국가경영의 원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통치지도자의 개인적 자질이라는 미시적인 요인에 주목한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치권력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전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한 개인의 행동양식과 통치유형이 정치권력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에는 권력이란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라고 관념이 깊게 배여 있으며, 정치권력의 핵심은 국가의 지배와 시민의 복종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나 권력개념에 대한 정치학의 이론화 업적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권력을 재산이나 소유물과 같은 물리적 실체로 바라보는 것은 행태주의적 시각에 한정된 개념정의 일뿐 실제로 정치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계급관계, 사물의 배열상태를 규정짓는 지식의 역할,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신분석학적 관계와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다.<sup>1)</sup>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을 권력의 물리적 독점을 행사하는 정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베버적 사유체계 도전하는 다양한 이론적 탐험이 있어 왔으며<sup>2)</sup>,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과거처럼 과대평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더구나 시민사회의 역

1)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 (2000), 6장 참조

2) 제습,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국가의 제자리 찾기』, 한울 (2000) 참조

할이 강조됨에 따라서 국가가 인민의 행복과 법적 권리를 관장하는 특수한 권력체라거나,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본질적이고 특권적인 지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포스트 모던 계열의 정치이론에 따르면 국가란 통치의 문제가 담화적으로 코드화되는 특수한 방식이고, 비정치적 영역들로부터 지배의 특수한 성격을 갖는 정치적 영역을 나누는 방식이며, 일정한 통치의 테크놀로지들이 잠정적으로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는 특수한 방식이라고 표현한다.(미셸 푸코, 1994) 따라서 현대정치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운영의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치리더쉽이라는 개념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권력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지평을 넘어서 보다 확대된 이론적 시야를 확보해야만 한다.

셋째는 유럽정치사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정치리더쉽이라는 개념이 정치영역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편협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성장과정에서 정치란 권력기구의 정당성과 효율적인 관리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왔기 때문에 통치(regerer)와 권력을 통한 지배(dominer)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현대 민주주의 관행에서도 국가경영의 철학이 마치 소수 권력엘리트들의 지배원칙으로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가운영의 원리는 마치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지배논리라는 의미로 축소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서양정치사상사를 연구하다 보면 통치와 지배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갖는 단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통치라는 말은 중세를 지배했던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이 각각의 신도들을 보살피고 인도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용어이다. 즉, 개인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신도들의 행동을 바른 곳으로 이끌며, 교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이에 반해 지배라는 말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권력구조가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단어로서, 여기에는 신학적 권위를 통해 자의적 권력행사를 원했던 군주권에 대항하여 권력행사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안착을 주장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이론적 도전의식이 담겨 있다. 지배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권력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서 최우선의 목표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Senellart, 1989)

이렇게 놓고 보면 통치의 개념이 개인의 인성과 영혼을 관리하려는 도덕적 지

도술의 원리였다고 하다면, 지배라는 개념은 권력행사의 법적 근거를 주창하는 이른바 주권적 권력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물론 대단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다. 대체로 중세를 거쳐 근대국가로 진행되는 서유럽의 정치사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패러다임은 이른바 마키아벨리적 국가이성개념이 이러한 정치적 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통치의 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물론 필자도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중세의 종교적 윤리관념을 대치한 국가이성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에 의해서 통치의 기술이 전적으로 중세와 단절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인은 근대국가 시기의 통치술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마키아벨리적 국가이성의 논리와 함께 중세에 지배적이었던 윤리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미하지만 남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루소의 시민종교론을 거론한 맥락이 바로 이것이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국내정치의 통치술이 대단히 과격한 비윤리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대국가에서 시민들의 충성심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개인들에게 일정한 윤리성을 요구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가이성이라는 용어보다는 통치술이라는 단어가 근대정치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보다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사실 프랑스의 지적 전통에서 루소 이래, 토크빌이나 현대 푸코의 사상을 관통하는 생각중에 하나가 인민들을 지배하는 감성적 분위기를 어떻게 정치안으로 포섭할 수 있을 까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중세와는 차별성을 갖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감성의 정치학, 혹은 윤리성의 정치학이라고 불러 볼만 하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주체를 국가통치술에 의해서 양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통치술이라는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성, 혹은 사회계약론과 같은 개념으로 근대정치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소홀히 다루고 있던 부분을 현대적으로 복원시켜 새롭게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배라는 단어는 국가이성론 혹은 사회계약론을 대변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운영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면, 통치술은 이것과 함께 정치적 주체의 양산을 동시에 고려하는(그래서 윤리성마저 포섭하는 국가운영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라

3) 박차섭, 『마키아벨리즘과 근대국가의 이념』, 현상과 인식 (1996), 참조

고 생각하고 여기서 필자는 과감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지배의 개념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우 마키아벨리적 유형, 조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홉스 유형, 피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로크 유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바람직한 국가경영의 원리는 이러한 두 원리가 통합되는 곳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민주정치체제는 서양의 근대국가체제의 성립 이후 자유민주주의(liberal-democracy)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음이 분명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의 자유주의란 바로 신학적 통치의 개념에 반기를 두고 시작된 계몽주의철학의 정치적 표현이다. 이 때부터 서양 정치에서 국가경영의 원칙을 고려할 때 통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고, 지배라는 관점에서 정치운영의 기술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치 현실에서 자주 거론되는 정치리더쉽이라는 개념이 근대정치 이후 등장한 지배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 조작적 용어라고 간주하는데, 그렇다면 정치사상적 입장에서 정치리더쉽은 정치의 일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불충분한 개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그러므로 형식논리의 차원에서 판단하건대, 현대적인 의미에서 바람직한 국가경영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신학적 의미의 통치와 법적 성향이 강한 지배의 양자를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필자는 이것을 두고 통치술 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 II. 국가운영의 두 모델: 목자-양떼의 모델과 시민-국가의 모델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서양정치의 흐름을 길게 두고 보면 우리는 유럽의 문화적 배경에서 서로 다른 두 특징을 대별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는 헬레니즘의 전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의 전통이다. 헬레니즘의 전통에서 정치란 공동체의 조직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해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력의 행사방식에 필요한 법적 정당성 따위가 관건이 되며, 정치리더쉽의 문제와 관련 지위 헬레니즘의 전통을 해석해 보자면 정치엘리트들의 교양(paideia: educational practice)이나 통치의 기본(energesia: Aristocratic civism)등에 강조를

두는 문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Dean, 1999 chap2) 이때 정치적 권위가 근거하는 기반은 정치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정해진 행위패턴의 준수나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에 깊숙히 연결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연구하면서 군주정, 독재정, 민주정 따위로 체제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 일반이론으로서는 대단히 상식적인 예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분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정치행위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 헬레니즘 문화의 지적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헤브라이즘의 전통에서 정치란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능으로 이해됨으로써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관리하는 문제가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 정치가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구분된다고 한다면 헤브라이즘의 전통에서 정치는 가진자와 못 가진 자 사의 연대관계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의 원류를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헬레니즘의 전통은 정치를 권력구조와 법적 권리차원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시민-국가모델이라고 한다면, 헤브라이즘의 전통에서 국가운영은 무형의 영혼을 관리하는 문제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 착안하여 목자-양떼의 모델이라고 불러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정치사의 흐름에서 시민국가의 모델은 그리스-로마시대를 품미했고, 목자-양떼의 모델이 중세시대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근대국가의 형성시기에 접어들면서 이 두 가지 모델이 혼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런데 현대정치를 이러한 근대정치의 파생물이라고 간주한다면 근대정치의 성립에 관여하는 두 모델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점검하는 것이 현대정치에 필요한 국가운영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여기에 필자는 홉스와 루소의 사상을 비교함으로써 근대정치사상에 나타난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대체로 중세적인 정치지도 원리가 붕괴되고 근대정치의 리더쉽 유형이 등장한 사례를 마키아벨리에서 찾는 것이 보통이나, 필자는 마키아벨리가 내세운 정치지도 원리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헤브라이즘적 정치윤리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주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치윤리를 강조했다던 그가 과연 국가라는 권력기구와 정치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마키아벨리보다는 홉스가 근대정치사상사에서 헬레니즘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지평의 국가운영의 원리를 밝힌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마키아벨리가 상상했던 군주란 신분적으로 보면 중세적인 성격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신학적 윤리관을 거부한 채 군주 개인의 사적 이해를 통치원리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홉스의 사상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군주권의 성립배경과 권력의 행사방식 그리고 정치정당성의 기원을 중세와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정치사상에서 정치리더쉽의 새로운 기초를 세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홉스의 『리바이던』은 근대정치에서 국가운영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선구적인 저작이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과 관련해서 보면 2부의 국가론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1장의 국가의 원인, 발생 및 정의에 대하여로부터 14장의 대표적 주권자의 직무에 대하여까지는 오늘날 정치학의 분과로 생각해 보면 법제도론이나 정부구성론에 해당한다. 국가의 발생에 있어서 개인들의 동의가 원초적인 출발점이지만, 홉스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실질적인 권력행사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개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의 사상속에서 이러한 능력은 바로 정치조직의 정비에 의해서 완성된다. 즉, 홉스에 있어서 주권적 권력은 바로 정치의 법률적 정비와 동의어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조직은 마치 인간의 육체와 같이 일정한 유기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장 효율적인 조직관리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또한 홉스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주권의 공적대행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지침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데(2부 7장), 이것은 오늘날 공무원 시행수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무가 인민의 안전과 생활상의 만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치운영에 있어서 실용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2부, 14 장). 이렇게 놓고 보면 홉스의 『리바이던』은 바로 현대정치가 정치리더쉽의 개념을 사용할 때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조직론, 통치자나 공무원의 자질론 등을 가장 먼저 거론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국가운영의 원리를 이처럼 조직이나 통치자의 자질론으로 구성하게 된 홉스 사상의 근간에는 당시 영국사회를 주도하게 될 시장사회질서와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 즉, 홉스는 완전히 시장적 논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해서 사상과 행동을 바

꾸어야만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국가운영의 철학과 도덕 그리고 정치적 의무라는 것도 시장사회의 필요성과 강제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홉스에 반대하는 휴머니스트들이 있다면 이러한 정치운영의 원리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이론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사회의 강제성은 항상 윤리적 이론의 중심에 놓여지는 자유로운 합리적 개인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휴머니스트들은 시장의 도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시장의 강제성과 시장의 도덕의 승인과 수용을 근거로 하는 의무이론이 소유적 시장사회의 가치를 최고의 또는 충분한 도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휴머니스트들에게는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sup>4)</sup>

위의 인용문에서 맥퍼슨이 말하는 휴머니스트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개인에 대한 정치적 가정과 사회적 시장질서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달라짐에 따라 국가운영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홉스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루소의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필자의 눈에는 루소를 통해서 근대정치사상속에 남아 있는 헤브라이즘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홉스와 비교할 만하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크게 보아 1부에서 3부까지의 구성과 내용이 『리바이던』과 매우 흡사하다.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주권의 개념과 정부형태에 대하여 논하는 3부까지의 내용은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치학의 범례를 따르고 있다. 다만 한가지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목은 4부의 마지막 장인 시민종교에 관하여 라는 부분이다. 『사회계약론』 전체가 새로운 정치체제가 달성해야 할 정치적 합리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고 한다면 4부의 마지막 장은 그 제목부터 대단히 이례적이다. 루소를 넓은 의미에서 계몽주의 계열에 속하는 사상가라고 할 때 그에게 종교란 분명 비합리적인 과거의 유산으로서 철폐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그의 책 마지막에서 시민종교에 대하여 논의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설명되어야 할 부분은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서 시민(citoyen)과 물리적 실

4) 맥퍼슨, 이유동 역,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1991), 150 쪽

체로서 자연인(homme)을 구분하는 것이 루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것이 루소 사상의 이중성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비교하건대, 홉스에게는 합리적 정치체 안으로 진입하는 사회계약의 모티브는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 개인의 도구적 이성이며, 따라서 정치적 주체로서 인간은 철저한 개인주의의 전형으로 가정된다. 그런데 루소에게서는 합리적 정치체의 구성이 이와 같은 계산적 이성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pitie)으로부터 비롯된다.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잘 설명되고 있듯이, 루소는 사회구성의 시작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성보다는 인간의 본원적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계약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시민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소는 세속적인 군주와 교권 사이의 권력투쟁이 유럽정치사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홉스라고 평가한다.<sup>5)</sup> 그러나 곧바로 홉스가 이룩한 정치적 통합은 종교적 기능을 배제한 채 불안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공격함으로써 그리스도교와 정치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를 정치적 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홉스가 당시 카톨릭 사제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국가권력이라는 독점적 권력에 의존했다면, 필자의 눈에는 루소가 고민한 것은 정치 안으로(법적 권리 안으로) 어떻게 종교적 감성이 결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가 정치영역에 종교적 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나 법률 관계를 정비하는 차원을 포함하여, 인간의 감성적 차원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루소가 가정한 정치세계에서 실존하는 인간은 철저한 합리성을 갖춘 시민(citoyen)이나 극단적 감성에 메몰된 자연적 인간(home) 사이에 존재하는 시민적-인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계약의 합리성과 종교적 감성의 조화<sup>6)</sup>가 바로 근대정치가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원리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말하는 종교란 당시 사회적 관계를 지배했던 카톨릭 자

5) 루소 『사회계약론』, 서울대출판부 (1999), 170쪽.

6) Goyard-Fabre, *Politique et Philosophie dans L'oeuvre de Jean-Jacques Rousseau*,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1, p. 130.

체를 지칭하기 보다는 인간의 윤리성을 고무시킬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루소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religion de l'homme*)와 시민의 종교(*religion de citoyen*)로 구분하고 있는데<sup>7)</sup>,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후자이다.

사회계약이 주권자에게 주는 국민들에 대한 권리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공적 유용성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공동체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만 주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그런데 국가로서는 각 시민이 그의 의무를 사랑하게 하는 종교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종교의 교리는 오직 그것이 윤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 종교를 믿는 자가 타인에 대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및 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순수히 시민적인 신앙고백이 있는데 그 신조를 정하는 것은 주권자가 할 일이되 종교의 교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의식으로서이다. 이 의식 없이는 선량한 시민도 충실한 국민도 될 수 없다.<sup>8)</sup>

시민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을 현대적 감각에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치적 교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적 정당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내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개인의 행동을 관리하고 욕망을 규제하며,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통치기술이 바로 헤브라이즘적 정치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바람직한 지도자상이나 통치원리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생활세계의 정치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는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세계에 관심을 갖는 정치원리를 찾는다는 것이 도덕적 이상주의로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생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체의 질서와 가치판단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한국정치에 필요한 국가운영의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처한 사회적 형태와 정치지형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동시에 포착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홉스와 루소의 사상은 현대정치의 국가통치원리를 고구하는 자리에서 일정한 원형(*idealtyp*)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루소, 앞의 책, 171쪽.

8) 루소, 앞의 책, 175~176쪽.

### III. 포스트 모던의 정치운영: 푸코의 통치술

그런데 근대정치를 구성하는 요인을 헬레니즘적 전통과 헤브라이즘 전통이라는 문화적 교차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통치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강단의 정치이론은 근대정치사상의 대표적인 정치적 이념으로 자유주의(liberalism), 민주주의(democracy), 사회주의(socialism), 공산주의(communism) 따위를 꼽고 있지만,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으로 평가할 때 과연 이러한 근대정치이념들이 갖는 차별성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미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근대정치이념들을 통치술의 원리차원에서 구분해 본다면 조직의 효율성이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 축과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또 다른 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이것이 홉스와 루소로 대변되는 사회계약론이 마련한 정치철학적 배경이다), 그 둘 사이에 역사적인 경험으로 자리잡은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존재한다.

Ferguson 과 같이 시민사회의 성립에 이론적인 기여를 했던 대표적인 사상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양 근대정치 발전과정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기능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사상보다는 역사적 경험이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사회계약론의 사회적 유포로 인해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된 서양 정치사의 경험과 크게 대조되는 사례이다. 예를 들어 1848년 2월혁명으로부터 1871년 파리공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유럽 정치사에서 전개된 노동자들의 사회운동은 점차 부르주아 정치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계약적 발상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또한 자신들이 자생적인 정치주체라는 자각을 갖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시민사회란 개념은 정치와 구분되는 경제의 영역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필자가 여기서 제시하는 시민사회란 조직의 축과 자율성의 중간입장에서 있게 되는 역사적 경험으로서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낸 자본주의의 특징적인 질서를 의미한다. 이때 위에서 열거한 네가지 근대정치사상의 대표적인 이념들은 바로 조직에 우위를 두는 공산주의와 개인의 자

율성에 우위를 두는 자유주의로 나뉠 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경우는 정부구성의 대표성을 시민사회에서 찾으려는 정치조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정치세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짝은 또 다른 결합방식을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조작적 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념형으로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구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 운영의 논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를 가로지르는 이른바 근대적 사고방식의 골격을 이해해야만 한다. 사실 공산주의를 계획경제를 강조하는 중앙집중성(centralite)의 논리에 의존하는 통치술이라고 간주하고, 자유주의를 이에 대비하여 개인들의 경제주체능력을 신뢰하는 통치술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때 중요한 사실은 중앙집중성과 자율성의 논리가 완전히 배제된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전혀 다른 정치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로는 모든 정치체제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중적 골격 구조 안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근대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사상적 담론을 메타이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정치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묘사 뒤에 담긴 사고의 일반유형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철학에서는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푸코 1987)이 이러한 작업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며, 맑스의 철학체계를 메타이론적 차원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는 J. Bidet(1990)가 있다. 근대정치체제가 형성된 이래 지금까지 모든 정치조직은 중앙집권화된 정부와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개인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3가지 요인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왔다. 다시말해 근대정치의 기본골격은 중앙집중성(centricite), 상호개인성(interindividualite), 사회성(associativite) Cf. J Bidet (1990, chp2)의 3중구조로 이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맑스의 『자본론』이 모두 동일한 근대성의 사고과정에서 출현한 동전의 앞 뒤면과 같은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지금까지 강단정치학에서 언급하는 국가통치원리나 정치리더쉽의 개념은 정치를 법률적인 틀속에서 한정하고 있는 이론적 입장인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권력을 단일한 절대

군주적 정치세력들이 소유(possession)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둘째 정치분석의 핵심문제들은 지배세력의 정체성이나 지배의 정당성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셋째 사회적 삶의 특정한 영역을 지배하는 정치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넷째, 국가를 동질적인 전체로서 인식하고, 다섯째, 국가의 행동양식은 통치주체들에 의해 다른 주체들에게 행사되는 것처럼 행정기구들(공무원, 경찰, 재무부 따위)의 지배양식이라고 생각한다.<sup>9)</sup>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모습은 물리적 실체로서 소유할 수 있는 성격이라기 보다는 개별행위주체들의 욕망과 가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또 권력의 기반이 국가조직이라는 법률적 제도 안으로 수렴되기 보다는 일상생활을 광범위하게 관통하는 무형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근대정치를 메타이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국가운영의 논리를 탐구하는 작업이 인식론적으로 한 단계 고양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갖는 정치에 대한 안목은 예컨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사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운영의 철학은 바로 근대성의 정치구조에 담겨 있는 특징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현대정치에서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정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하는가를 메타이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립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셸 푸코의 통치술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에 따르면 서양의 정치사에서 등장했던 통치술의 특징적인 흐름을 메타이론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리스-로마 시대의 통치술, 중세의 기독교적 통치술, 근대초기 국가이성의 통치술, 그리고 18세기를 전후하여 등장하는 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대정치는 바로 18세기에 태동하기 시작한 자유주의적 통치술의 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주의가 동원한 원초적 통치술의 기예를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현대정치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정치운영의 요인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자유주의 정치원리는 세가지 특징적인 통치기예(art de gouverner)를 갖는다. 첫째는 사회계약론으로부터 유래하는 법률적·행정적 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근대국가의 영토성을 확립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9) 미셸푸코의, 『미셸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145쪽.

으며, 주권적 권력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시 정치의 일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는 것인 만큼, 이 전통은 마키아벨리적 근대국가이성의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경제적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기예로서, 모두의 공공복지를 위한 현명한 통치를 실행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예컨대 국가내의 주민들, 재산, 개개인과 인구전체의 행동에 대한 통치가 중요한 임무인데, 18세기에 통용되었던 경찰국가(polizeistaat)의 성격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람에게 부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물을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개인을 교육하고 통제하여 순화된 육체를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18세기 이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학교, 의료시설, 군대조직들이 훈육적 통치기예를 실천했던 권력장치들이다. 셋째는 개인의 영혼을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된 안전(security)의 통치기예이다. 훈육적 통치술이 개별자들을 목표로 했다면, 여기서 사용된 통치기예는 전체인구를 관리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경제가 가족의 모델을 출발점으로 했다면, 전체인구의 관리에 대한 통치술도 역시 가족의 모델을 국가차원으로 확산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출생률이나 사망률에 대한 관리, 결혼에 대한 국가적 통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캠페인과 같은 문제들이 인구를 통한 국가통치기예의 효과가 나타난 계기들이다. 이시기를 전후하여 인구를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를 형성하는 각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나 사회적 무의식을 관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 만큼, 국가권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통치의 목표라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18세기 후반으로부터 유럽자유주의의 핵심은 바로 인구관리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대정치는 바로 이러한 세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근대적 자유주의 통치기예를 정치적 유산으로 물려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군주권의 사회가 훈육사회로 대체되었다고, 뒤이어서 훈육사회로 대체되었다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는 말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인구를 일차적인 표적으로 하고 안전기구를 본질적인 기제로 삼는, 군주권-훈육-통치라는 삼각관계가 존재한다. 어찌거나 나는 군주권의 불변성을 전복시키고 따라서 통치의 선택들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운동, 인구를 하나의 데이터로서, 개입의 장이자 통치테크닉의 대상으로서 등장시킨 운동과, 경제를 특정한 현실의 부문으로 분리시키고, 그러

한 현실의 장에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을 통치의 개입테크닉으로서 성립시킨 과정들 사이의 내밀한 역사적 연관을 보여주고자 했다. 통치, 인구, 정치경제학이라는 세가지 운동은 18세기 이래 공고한 연관을 맺어 왔으며 이것은 오늘날에조차도 결단코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sup>10)</sup>

그런데 여기서 자유주의 통치기에와 관련하여 몇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인구의 통치와 관련하여 18세기 후반부터 지식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인구와 관련된 모든 지식은 국가 행정기구의 통계자료를 통해 표현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통치·지식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대체로 서유럽에서 노동통계청이 설치되고, 매년 경제적 지표와 관련된 인구동향이 조사, 관리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sup>11)</sup>

둘째는 자유주의 통치술이 근대정치의 주체들을 생산해 내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강단정치학에서는 자유주의 정치학은 개인들이 자율적인 행위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메타이론적인 차원에서 근대정치학의 담론을 해체론적으로 독해한다면, 이러한 전제가 반드시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치주체들의 자율성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들과 같은 개념들이 과연 역사적 실체로서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학술담론들이 만들어 낸 일종의 허구인지를 판단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sup>12)</sup> 대체로 푸코의 계보학적 입장을 찬성하는 학자들은 정치주체들이 학문적 대상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당시를 지배했던 학술담론들이 만들어 낸 정치적 효과라고 본다. 예를 들면 정상인·비정상인의 구분이라는 것이 의학, 범죄학, 골상학, 인구학과 같은 당시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처럼, 맑시즘이나 우파의 정치이론들도 계급이나 자율적 개인이라는 개념들을 허구적으로 만들어 당시의 주도적인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것이다.<sup>13)</sup>

이렇게 놓고 보면 한 시대의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그에 상응하는 통치술의 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10) 미셸푸코, 앞의 책, 46쪽.

11) 최정운, 『지식국가론』, 삼성출판사 (1992), 참조.

12) A. Barry ed.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UCL Press, 1972, p. 73.

13) Mitchell Dean, Goremmentality, Sage Publication, 1999, chapl.

있다. 일정한 통치체제가 성립하고 쇠락하는 과정 자체가 경제제도나 법률적 정비 체제가 바뀌어 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개인과 국가 혹은 시민사회를 관통하는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가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끊임없이 자기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적 연구는 우리들에게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주도했던 지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IV. 한국 현대정치에서 통치술의 교훈

지금까지 필자는 한국 현대정치의 기본골격이 18세기를 전후로 서유럽의 정치적 맥락에서 탄생한 자유주의 정치체제로부터 유래한다는 전제 아래, 서유럽 정치사에서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활용했던 국가운영의 세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로부터 18세기 자유주의의 고전적 모델과 한국정치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운영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단적으로 우리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서 18세기적 통치술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조정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현실정치가 작동하는 근거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과거 18세기 자유주의 정치는 국가의 영토성, 개인의 자율성,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응하는 통치술의 기본골격은 주권적 권력의 완성, 훈육적 통치기예의 확충, 생체적 정치기구들의 확보라고 요약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면, 변화의 요인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치술을 정비하는데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즉, 한국정치가 고전적인 자유주의 모델에서 어떠한 변형을 거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현대 정치의 변화는 한국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대 유럽정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있는 몇몇 선구적 학자들의 이론적 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현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든스의 분석은 현대 서유럽 정치가 당면한 딜레마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중요한 토론의 전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든스

는 서유럽에서 좌파와 우파의 정치구분이 더 이상 실효가 없다는 논리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현대정치의 특성들을 다섯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들을 근대정치의 통치술과 관련하여 세가지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정치가 준비해야 할 새로운 통치술(혹은 새로운 국가운영의 원리)의 과제와 목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 1. 주권적 통치술의 변화

주권적 권력을 관리하던 근대적 통치술의 범위와 성격이 오늘날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위 범세계화의 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현대정치의 가장 특징은 범세계화로 말미암아 민족국가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정치의 영토적 특징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범세계화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나, 기든스는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하여 우리의 생활세계를 지배하던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에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축소가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다. 요컨대 기든스에 따르면 범세계화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들의 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초국가적 체제와 세력의 등장이다. 그러나 범세계화의 문제를 두고 서유럽과 달리 한국정치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필자가 느끼기에 기든스 논리의 이면에는 범세계화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단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전제가 있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범세계화 현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서구와는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중요한 사실은 서구 선진국가들 사이에서 범세계화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의 적응과정이며,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른 생산의 재편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이 과연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환란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경제 체제를 만든다는 구호아래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진행시켜가며, 은행들의 통합과정을 강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경제적 문호개방이 자칫 초국적 투기세력의 막강한 자본력 앞에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만 한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범세계화는 곧 미국화를 의미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대단히 위험스럽다.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수출만이 국가의 살길이라는 명분 아래 수출 의존적 국가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한국은 대미경제의존도가 지나쳐 자생력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미국경제가 호황을 누리며 세계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이끌어가는 상황이라면 한국에도 불리할 것이 없으나, 요즈음 같이 미국경제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경제불황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범세계화라는 명분아래 미국경제에 밀착하는 것이 언제나 득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만 한다.

둘째, 범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한국정치는 지금까지 의심의 여지없이 지켜왔던 혈연적 민족주의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이 문제는 특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동포의 정치 참정권 문제나 혹은 외국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문제,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만들어가야 할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해외동포문제가 동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노동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관리의 차원에서 점차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외국에 대한 경험부족이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인데, 이제는 지나친 사대적 자세와 더불어 지나친 경멸의 차원 모두를 넘어서는, 외국에 대한 독자적인 자세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 또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치세력 중에서 이른바 진보진영은 북한을 동족이라는 구호아래 지나치게 혈연 중심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반면, 나머지 수구세력들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려는 강경한 자세를 전혀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구태여 꼽자면 군사정권시절의 왜곡된 반공교육의 부정적 영향 탓이지만, 어쨌든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진보와 수구 양 진영에 모두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정치는 북한에게 혈족이나 적이라는 이분법적 차원을 모두 넘어서 새로운 정치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대북관계의 정치적

입장정리가 모두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국가주도 혹은 정부주도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유연한 통치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국가운영의 틀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고해 보아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정치의 최대 목표는 근대국가의 완성이었고, 이를 위해 동원된 정책 목표가 바로 산업화와 근대화였다. 모든 국가적 역량이 부국강병에 모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의 근대화 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과연 근대화와 산업화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념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백의 표현을 빌어 설명한다면(1998, 2000)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산업화 정책이 단순근대화의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모순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찰적 근대화의 과정이 도입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급진적으로 한국정치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면,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자유주의 이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이미 필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서유럽 정치사에서 정치체제의 조직과 운영의 원리로 등장했던 다양한 정치이념들이 순수한 형태로 현실에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언제나 다른 정치이념과 혼합된 형태를 띠어 왔다. 따라서 한국정치가 급과속 조처럼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이 보다 신축적으로 한국현실정치에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모델과 같은 다른 이념적 지향과의 혼합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고한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들이 이러한 사상적 시도를 어느 정도 허락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이 소위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조직과 운영으로부터 유래하는 부정적 효과에서 연유하는 것인 만큼,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국가정비 모델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더구나 장차 북한과의 통일문제를 앞두고 있는 21세기 한국정치가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족통합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유주의 모델과 사회주의 모델을 발전적으로 융합시킨다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통치술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혼육적 통치기술의 변화

근대적 개인주의의 모델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근대 자유주의 정치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정치적 결정에 반영하려는 자율적 개인(*autonomous individual*)을 정치이론의 전제로 삼고 있었고, 사회주의 정치이론 또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집단적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공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강조해 왔다. 또 국가권력은 좌우를 막론하고 학교, 공장, 군대 따위와 같은 혼육적 조직들을 동원하여 자율적 개인을 양성하거나 혹은 집단적 연대감을 고무하는데 통치술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 정치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개인들은 근대정치가 생각했던 자율적 개인도, 집단적 연대감을 갖춘 개인도 아니며, 자기우선의 이기적인 개인들로 전락해 버렸다. 더구나 이제는 국가기구에 의해서 개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지나버린 느낌마저 든다. 기든스의 진단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주의의 변질은 전통과 관습의 후퇴와 관련되어 있을 뿐, 이것이 도덕성의 타락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변혁기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주의의 과도기적 현상이며,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개인주의가 재구조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개인주의의 변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예컨대 68년을 전후로 한 서유럽의 사회적 변혁기에 개인주의의 변질을 지적하는 이른바 나르시즘적 개인주의 라쉬(1989) 라는 용어가 등장한 바 있으며, 이때부터 계급정치의 종말이라는 예언도 함께 거론된 바 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건대 근대정치의 축을 이루고 있던 혼육체계가 과거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혼육적 통치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제도화된 개인주의<sup>14)</sup>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민적 정체성을 이루어가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생산관계나 학교와 같은 재생산체계가 아니며,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임금이나 명예 따위로 축소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제는 물질적 욕구 못지 않게 사회적 욕망의 체계를 관리해야 단계에 이르렀으며, 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14) 백,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2000) 38쪽.

노동자나 학생 혹은 경영자라는 단일한 역할체계에 묶여 있기 보다는, 다중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향유하려고 한다. 따라서 개인들을 관리하던 근대적 훈육체계의 통치술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주의 변형은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권에서 하루 속히 인정해야 할 사실은 더 이상 오늘날의 개인들이 이데올로기 국가장치가 부여하는 기능적 역할체계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유신정권에서 반공교육에 익숙한 교육행정가들은 아직도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일탈행위를 법적 제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 모르나,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개인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의 다문화적 통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강제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생활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소위 라이프 스타일의 정치(기든스, 1997b ; Breton, 2002)는 이제 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정치의 대상을 제도적이거나 법적인 것으로부터 비가시적이며 욕망의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바꾸도록 유인했다. 과거에 해방의 정치가 강조되어 왔다면 현대는 생활정치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다. 개성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생활의 정치는 개인들의 내적 세계와 관련된 사안에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낙태문제, 성 정체성의 문제, 건강, 다이어트, 성행위, 유전공학 등등 얼핏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른바 주변적인 것들 혹은 미시적인 것들이 개인들의 삶을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국은 한국정치의 지형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

둘째,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강고한 민족주의 이념교육을 강조했다면 세계화의 시대에 과연 한국민의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재형성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도 대단히 시급하다. 월드컵 이후 확산되고 있는 한·일 간의 문화교류 등도 사실은 보다 심층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깊숙히 연결된 문제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개인들의 정체성은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조되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한국인들 개개인들이 어떠한 성격의 개인주의를 갖게 되는가가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겠다. 과거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강요되었던

안정, 복종과 그에 맞서는 자유, 평등, 해방이라는 가치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가치관들, 예를 들어 자율, 쾌락, 만족들이 개인들의 행동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들은 과거의 정치적 경험에서는 대단히 사소한 것으로 경시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가치와 기대들이 개인들의 사적 영역을 이루는 주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정치권으로 흡수하는 작업이야말로 새로운 통치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한국사회의 계급갈등과 관련된 사회분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한국 사회의 계급구성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계급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물질적 가치지향에 따라 계급적 행동이 결정되기 보다는 아직도 지역주의나 연고주의가 정치와 연관된 계급행동의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역문제는 경제개발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생긴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보다 정교하게 이 문제를 연구해 보면 거기에는 경제적 분배뿐만 아니라 지역의 집단적 감정이나 언론에 의한 부정적 효과들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홍성민, 2002) 이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행동들의 심층적인 요인들을 살펴봐야만 한다. 필자가 여기서 지역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서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지역주의적 정체성을 계급적 정체성으로 변화시키야 하며, 계급정당의 출현이야말로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 지역주의를 정권획득에 이용해서는 안되며, 한국정당구조가 하루속히 계급기반을 전제로 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 3. 안정망 통치술의 변화

인구를 관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했던 근대적 통치술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주된 이유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백의 『위험사회 백 (1997)』이라는 책은 오늘날 국가운영의 기본방침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백에 따르면 근대정치사에서 국가가 개인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전제했던 위험의 수준은 대부분 산업재해와 관련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산업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체적 훼손이나 실업의 위험들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동원했던 통치술의 기본방침은 개인들이 겪게 될 위험을 사후적으로 보상하거나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는 차원에 집중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제반 정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 후기 산업사회가 처해 있는 위험의 종류가 이제는 달라졌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개인을 상대로 사후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우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의 사회적 확산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해임에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통제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거나 보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회적 재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생산시스템이나 삶의 질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딜레마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백이나 기든스는 성찰적 근대화 개념을 앞세워 시민사회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 내부에서 정치나 경제 혹은 문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개인들의 삶의 정치와 연결지워 감으로써 위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간다는 구상이다. 최근 하부정치 (기든스, 1993) 혹은 아정치 (백, 1997)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이론적 맥과 궤를 같이 한다. 이점과 관련해서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자.

첫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통치술의 구축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아직도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복지국가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의 종류가 역시 한국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을 바꾸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탈산업사회에 대한 비전을 포길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부국강병의 논리아래서 아직도 산업생산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재해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개발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권적 통치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된 권력구조의 정비문제와 맞물려 있다. 자본주의·자유주의라는 과거의 경제·정치의 논리를 고집하는 한 이른바 생태적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자는 시민사회조직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sup>15)</sup> 다만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학문과 언론분야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시민운동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본 논문에서 줄곧 강조해 왔듯이, 지식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한다고 할 때, 필자가 보기에 한국정치에는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역시 이러한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기관이 역시 대학과 언론분야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중요한 치적이라면 대북관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원조나 협상을 두고 남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끝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의 유통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평가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만들어 내는 지식인의 계급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지식인은 결코 보편적인 인물이 아니며 정치변혁의 투쟁이면에는 지식의 패권투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국가통치 체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반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식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각 분과별로 전문적 지식인과 시민운동이 연대를 해야 하며, 그 연대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야 한다.

셋째, 지식의 공급과 유통과정이 사회정책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정책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한 사회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보이고 있는 개념들, 예를 들어 질서, 자유 등과 같은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는 수준과 방법에 따라서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성과가 달라지고 만다. 일견 경제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며, 질서나 자유와 같은 개념들은 일반들이 시민사회에서 유통되는 지식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상식적인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서로간의 관계를 간과하기 쉬우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적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동의를 보내는 가야 말로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구나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초는 경제와

15) 박형준,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의암출판 (2001) 참조

정치 그리고 문화를 관통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질서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구조 혹은 지방자치에 이르는 연방구조에까지 질서와 자유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한국정치의 병폐를 지적한다면 국가정책의 전문성과 시민사회의 상식수준에 여전히 괴리가 존재하며, 국가정책이 경제나 정치분야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중의 하나가 한국학문의 자생력 부족에서 찾고자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국정치는 권력과 진실의 게임(Perason, 1985)을 조정할 수 있는 통치술을 정비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 곽차섭, 『마키아벨리즘과 근대 국가의 이념』, 현상과 인식, 1996.
- 김명환, 『리더쉽론』, 박영사, 1973.
- 김석준,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 풀빛, 1991.
- 김석준, 『국가변동론』, 법문사, 1995.
-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 김석준, 『국가능력과 경제통치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영국, 『마키아벨리와 군주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김용환, 『홉스의 사회·정치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
- 기든스,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3.
- 루소,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마키아벨리, 홉스, 임명방·한승조 역, 『군주론 리바이어던』, 삼성출판사, 1993.
- C.B. 맥퍼슨, 이유동 역,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1991.
- 미셸 푸코 외,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 미셸 푸코 외, 『자기의 테크놀로지』, 동문선, 1998.
- 박기덕 편,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 박효중,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1.
- 박형준,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의암출판, 2001.
- 백, 『정치의 재발견』, 거름 1998.
- 백,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2000.
- 새시대전략연구소, 『차기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 새시대전략연구소, 2001.
- 알랭 로랑, 『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2001.
- 정운재, 『장면, 윤보선, 박정희: 1960년대 초 주요 정치지도자연구』, 백산서당, 2001.
- 제습,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국가의 제자리 찾기』, 한울 2000.
- 진원숙, 『마키아벨리와 국가이성』, 신서원, 1996.
- 채수명, 『한국대통령학과 대권시나리오』, 이유, 2002.
- 최평길, 『대통령학』, 박영사, 1998.
- R. 터커, 『리더십과 정치』, 까치 1977.
- 최정운, 『지식국가론』, 삼성출판사, 1992.
- 한국산업사회학회,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체제』, 한국산업사회학회, 2001.
- 한상욱, 『정보화 사회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함성득, 『대통령학』, 나남출판, 1999.
- 함성득 편,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출판, 2000.
-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 2000.
- 홍성민, 「계급 아비투스와 정체성의 정치: 한국 지역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 『사회연구』 4 집 2002.
- 황주홍·황필홍, 『폐자부활전-희망의 다른 이름』, 풀빛 2002.
- A. Barry ed.,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UCL Press, 1992.
- X. Browaey, O. Duhamel, J. Parodi, H. Weber, La Raison Detat: Politique et Rationalit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 G. Burchell, C. Gordon and P. Miller ed., The Foucault Effec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A. J. Cascardi, The Subject of Moder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Mitchell Dean, Governmentality, Sage publications, 1999.
- J. Donzelot, Linvention du Social, Fayard, 1984.
- J. Donzelot, The Policing of Families, Pantheon Books New York, 1979.
- S. Goyard-Fabre, Politique et Philosophie dans Loeuvre de Jean-Jacques Roussequ,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1.

J. J. Guiomar, La Nation Entre Lhistoire et La Raison.

P. Ladriere, C. Gruson, Ethique et Gouvernabilit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A. Libera, La Philosophie Medieva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Joseph Pearson ed., Power and Truth: The Problematization of Parrhesia, 1985.

M. Senellart, Les Arts De Gouverner, Editions Du Seuil, 1995.

M. Senellart, Machiavelisme et Raison dEtat,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U. C. Zarka, Raison et Deraison dEtat,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4.

주제어

통치술, 정치리더쉽, 포스트 모던